

# 경북행복 BRIEF

제29호 2019. 10. 1.

법 인 명 칭 (재)경북행복재단  
발행·편집인 (재)경북행복재단 편집부  
주 소 39332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155 글로벌관 3층  
T E L 054-710-8814  
홈 페이지 www.ghf.or.kr

- 1 이웃사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 
남영우(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) 외 2명<sup>1)</sup> ..... 1p
- 2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  
김동화(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) ..... 11p

## 1] 이웃사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<sup>2)</sup>

### 1. 지역 복지환경 개선과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

- 경상북도는 전국 고령인구비율 14.21%에 비해 고령인구비율이 19.05%로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임 (통계청, 2017).
- 2018년 6월 기준, 전국 228개 시·군·구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은 89곳(39%)으로, 경상북도는 23개 시·군 가운데 19개 시·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음(이상호, 2018).
- 경상북도는 지역의 복지수요 증가,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환경 개선과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민선7기 도정운영 4개년 계획을 통해 경북 이웃사촌 행복공동체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음(그림1).
- 본 연구는 경북 이웃사촌 행복공동체 육성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상북도 이웃사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 이를 통해 지역의 복지수요 증가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복지체감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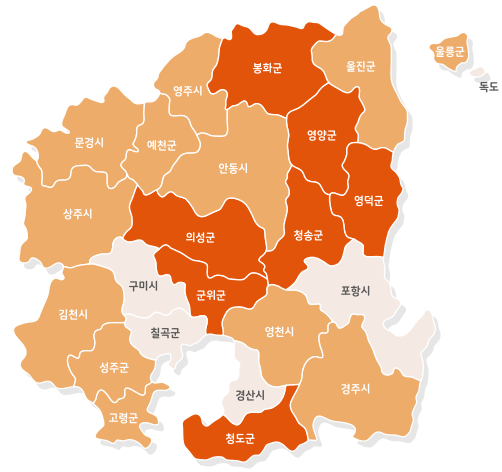
1) 책임연구원 남영우(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)

공동연구원 김보영(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), 채현택(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)

2) 본 내용은 경북행복재단(2019)에서 연구된 '이웃사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' 보고서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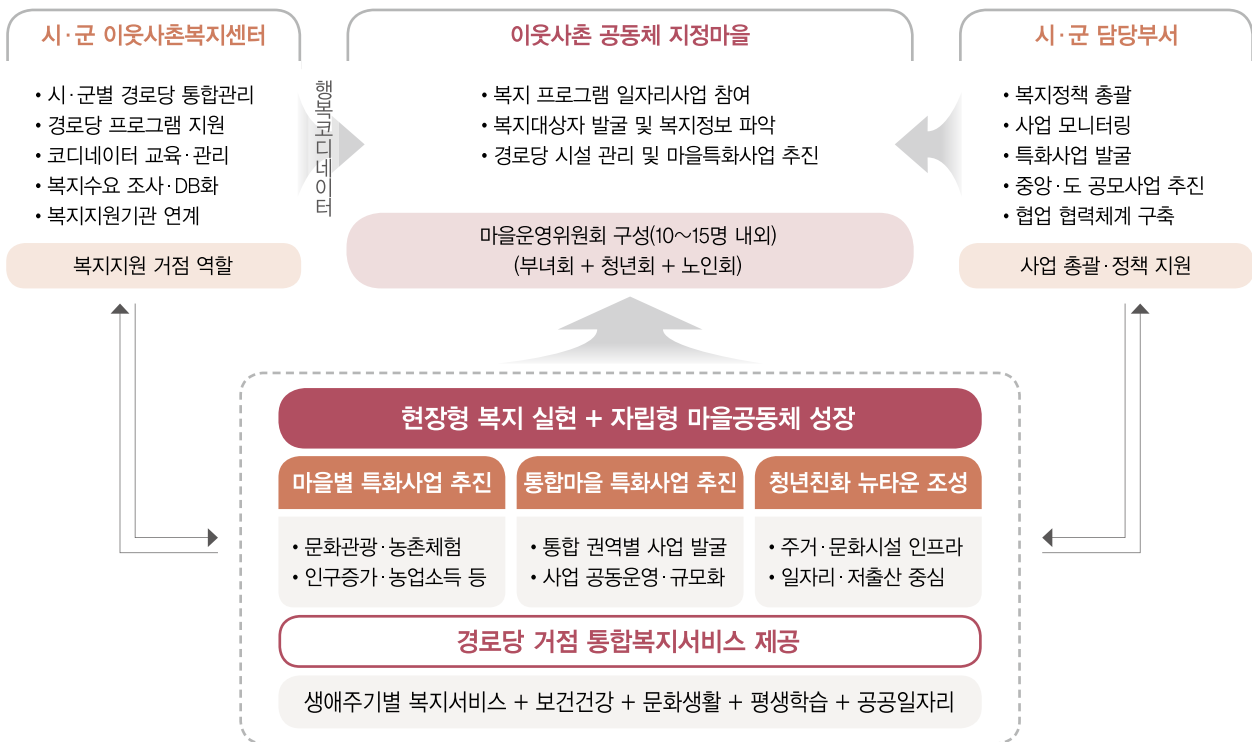
[표 1] 경상북도 소멸위험 해당 시·군 지역 현황

시·군명	전체인구	20-39세 여성인구	65세 이상 인구	소멸위험 지수
의성군	53,166	3,112	20,567	0.151 ●
군위군	24,386	1,522	9,008	0.169 ●
청송군	25,874	1,642	8,921	0.184 ●
영양군	17,482	1,137	6,074	0.187 ●
청도군	43,171	2,913	15,008	0.194 ●
봉화군	33,177	2,171	11,012	0.197 ●
영덕군	38,381	2,617	13,248	0.198 ●
상주시	100,217	7,783	28,905	0.269 ●
성주군	44,745	3,500	12,996	0.269 ●
예천군	52,068	4,291	15,777	0.272 ●
고령군	33,360	2,601	9,299	0.280 ●
문경시	72,608	5,873	20,180	0.291 ●
울진군	50,454	4,194	12,981	0.323 ●
영천시	100,312	8,643	26,400	0.327 ●
영주시	107,578	9,172	26,087	0.352 ●
울릉군	10,010	877	2,268	0.387 ●
안동시	162,720	16,267	36,586	0.445 ●
경주시	257,137	25,571	51,809	0.494 ●
김천시	141,978	14,860	29,989	0.496 ●



● 소멸위험지수 0.2 미만 : 소멸고위험 지역  
 ● 소멸위험지수 0.2 ~ 0.5 미만 : 소멸위험진입 단계

자료 : 이상호(2018)



자료 : 경상북도(2018)

[그림 1] 경북 이웃사촌 행복공동체 사업 운영체계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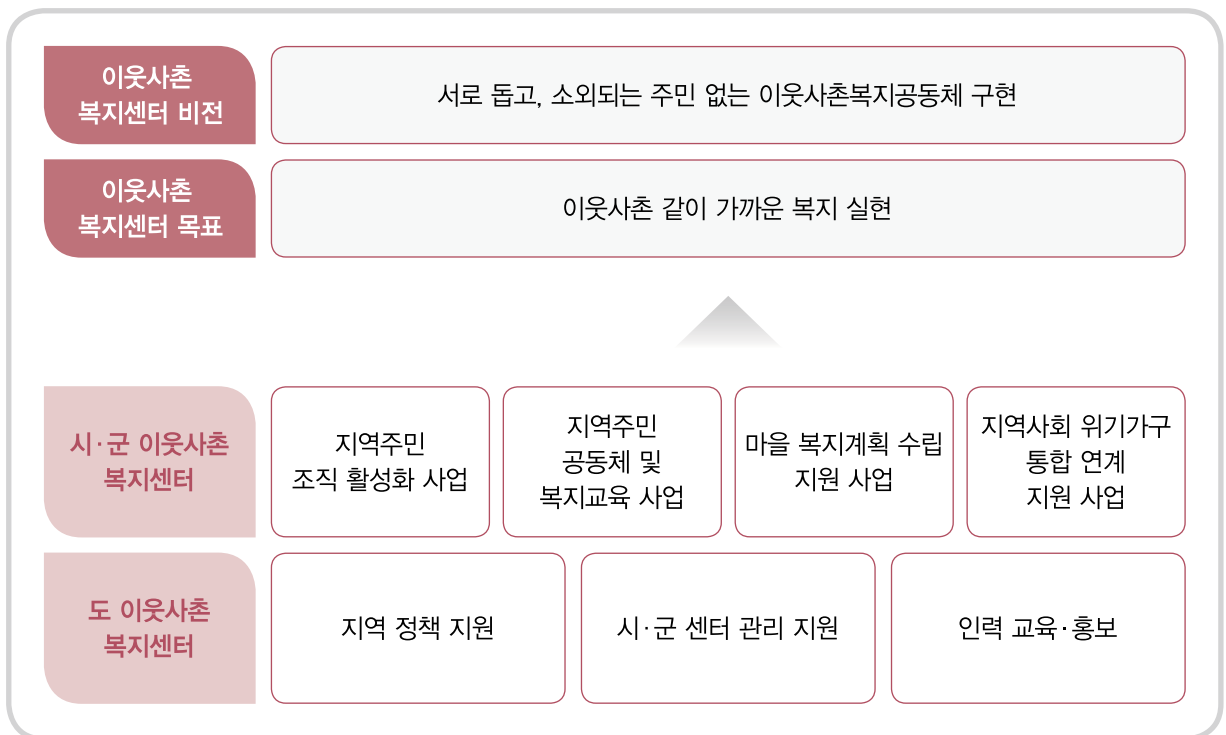
## 2. 이웃사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

### 1)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 모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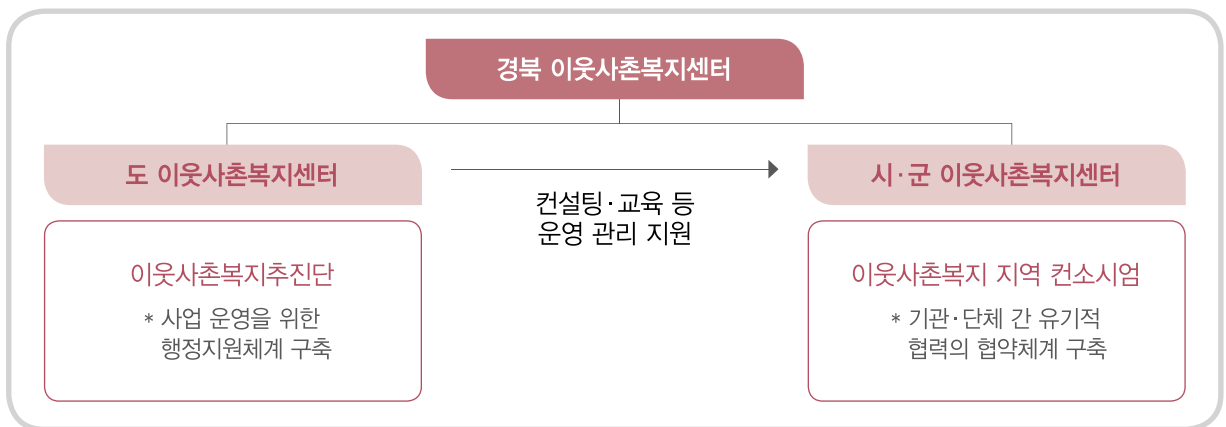
#### ■ 이웃사촌복지센터 개념

서로 돕고, 소외되는 주민 없는 이웃사촌복지공동체 구현 및  
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지원 중간조직

#### ■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체계도



#### ■ 이웃사촌복지센터 추진체계도



## 2) 시·군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체계

### ■ 시·군별 1개소 설치

### ■ 이웃사촌복지 지역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

- (기능) 이웃사촌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다수의 기관·단체 간 유기적 협력 협약체계 구축
- 사업대상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공공·민간조직으로 구성
-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공공·민간조직(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) 우선 참여

### ■ 시·군별 1개소 당 현장전문가 3인 배치(팀장 1인, 팀원 2인)

### ■ 시·군 이웃사촌복지추진단을 구성하여 이웃사촌복지센터 지원

- (기능) 시·군 이웃사촌복지센터 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

## 3) 시·군 이웃사촌복지센터 주요사업

### ■ 지역주민조직 활성화 사업

- 사업 내용(예시)

- ① 읍·면·동 단위의 위기주민을 발굴·지원하기 위한 마을지킴이 주민모임 조직화
- ② 독거노인의 건강과일 도시락 배달과 정서 지원을 위한 동료 친구모임 조직화
- ③ 독거 청장년층과 취미생활 공유 및 친구 되기 주민모임 조직화
- ④ 다문화가정의 아동학습 지도를 위한 주민모임 조직화
- ⑤ 마을 경로당이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민모임 조직화
- ⑥ 취미활동을 지역사회에 자원봉사로 보급하고 경로당, 복지시설, 공원 등에서 무료 공연하는 지역공연자모임 조직화
- ⑦ 저장강박 문제를 가진 어르신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 환경지킴이 주민봉사모임 조직화
- ⑧ 고혈압, 당뇨, 비만 등 만성질환을 가진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모임 조직화
- ⑨ 알코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알코올 남용 주민모임 및 알코올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모임 조직화
- ⑩ 기타

## ■ 지역주민 공동체 및 복지교육 사업

– 사업 내용(예시)

- ① 시·군 및 읍·면·동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공동체 및 복지교육 교육과정 개발과 정기적인 교육
- ② 지역주민의 복지활동과 연계된 주민복지교육
- ③ 지역사회 내 초·중·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공동체 및 복지교육
- ④ 인근 대학교와 연계된 공동체·복지교육 및 학점 취득과 연계된 교과과정 개발 및 교과목 개설
- ⑤ 복지대상자가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주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복지교육
- ⑥ 지역주민의 공동체 및 복지의식 확대와 연계된 문해교육
- ⑦ 지역의 취약계층 학습권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지도자 교육
- ⑧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
- ⑨ 마을 단위 독거노인의 지역사회보호 목적의 평생교육
- ⑩ 다문화가정의 아동학습 지도를 위한 배후 광역지역의 대학생 공동체 및 복지의식 교육
- ⑪ 지역주민의 취미활동과 공동체 및 복지활동이 융합된 복지교육
- ⑫ 기타

## ■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 사업

– 사업 내용(예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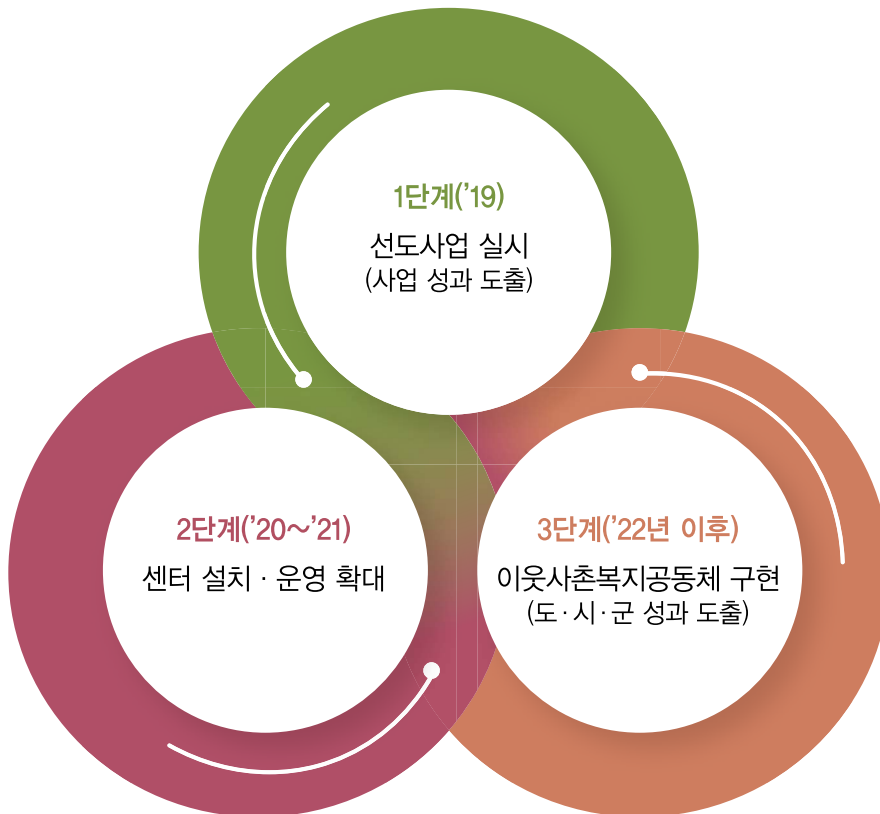
- ① 최근 서울, 경기, 광주 등에서 추진된 마을공동체계획 혹은 마을계획 등의 선행 활동 참고
- ②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TF팀 구성
- ③ 마을복지계획이 가지는 정부·지자체 계획과의 통합, 민·관 협력, 주민 참가 가능성 등을 고려
- ④ 마을복지계획 내 마을단위 지역사회문제(수요, 공급에 따른 격차 검토), 마을의 복지 비전 제시, 매년 수행해야 할 다양한 지역특화사업 계획, 지역특화사업 모니터링과 평가활동 등을 포함
- ⑤ 마을복지계획의 내용을 계획 참여자 스스로 결정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도모
- ⑥ 마을복지계획 수립 과정과 수립 내용이 지역공동체 형성과 연결되도록 기획
- ⑦ 기타

## ■ 지역사회 위기가구 통합 연계 지원 사업

– 사업 내용(예시)

- 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재가지원서비스의 통합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
- ②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민·관 자원 발굴
- ③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와 민·관 자원간의 신속한 연계를 위한 온라인망 구축
- ④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IT 융합 활동  
예)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을 위한 카카오톡 활용 등
- ⑤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민·관 연계·협력 활동
- ⑥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민·관 네트워크 활동 및 협의기구 구축
- ⑦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시·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개발
- ⑧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읍·면·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
- ⑨ 통합적인 지역사회 위기가구 지원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
- ⑩ 기타

## ■ 시·군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 로드맵



#### 4) 도 이웃사촌복지센터 주요사업

사업	지역 정책 지원	시·군 센터 관리 지원	인력 교육·홍보
	정책 분석·개발	시·군 센터 컨설팅	인력 교육
	시·군 정책 분석 / 센터 모델·정책 개발	기초 컨설팅 / 우수 사례 발굴·확산	직무·소양 교육
	지역자원 분석	시·군 센터 모니터링	사업 홍보
사업 내용	민관 자원 조사 / 정보 제공	현장점검 지원 / 개선과제 발굴 / 사업효과 측정	지역 내 홍보

### 3. 이웃사촌복지센터 선도사업 개요

#### 1) 선도사업의 목적 및 추진목표

■ 목적 : 지역 실정에 맞는 선도적 센터 운영 모델 개발

■ 추진목표



## 2) 2019년 선도사업 개요

■ 사업대상 : '19년 도 센터 1개소, 시·군 센터 4개소를 시작으로 전 시·군 확대

### ■ 사업내용

- 도 이웃사촌복지센터

- 정책 분석·개발, 지역자원 분석, 시·군 센터 컨설팅 및 모니터링, 인력 교육, 사업 홍보

- 시·군 이웃사촌복지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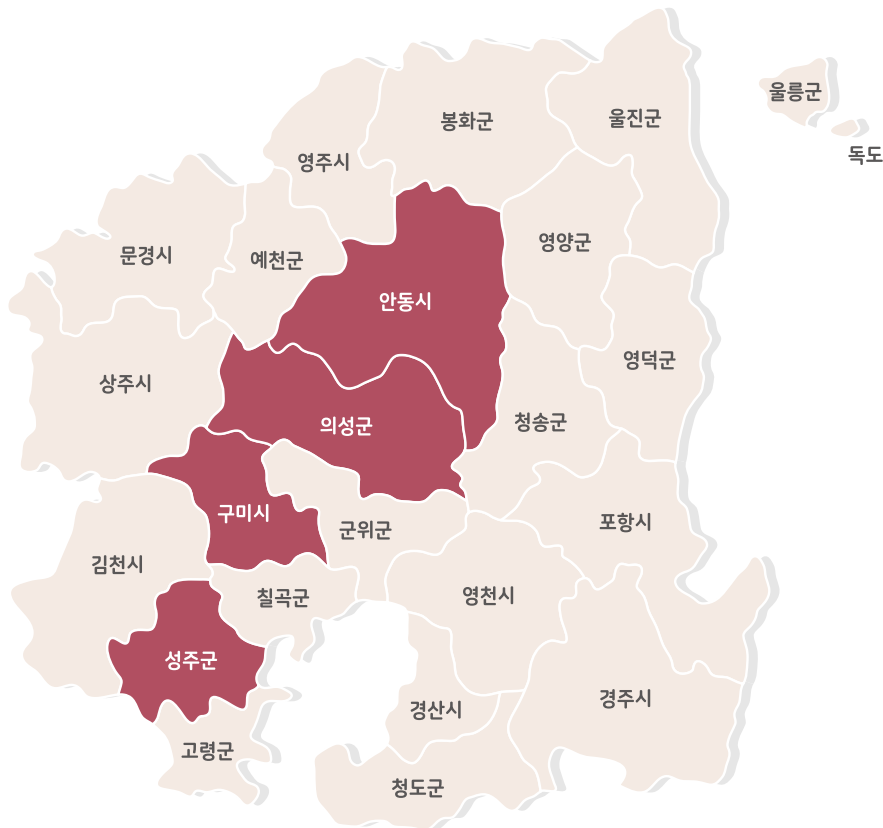
- 지역주민조직 활성화, 지역주민 공동체 및 복지교육,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, 지역사회 위기가구 통합 연계 지원
- 시·군 이웃사촌복지센터 선도 사업지역 : 안동시, 구미시, 의성군, 성주군

■ 소요예산 : 15억 원

### ■ 사업인력

- 도 이웃사촌복지센터 : 4인(팀장 1, 팀원 3)

- 시·군 이웃사촌복지센터 : 3인(팀장 1, 팀원 2)



[그림 2] 시·군 이웃사촌복지센터 선도사업 선정지역

### 3) 선도사업 기본 운영모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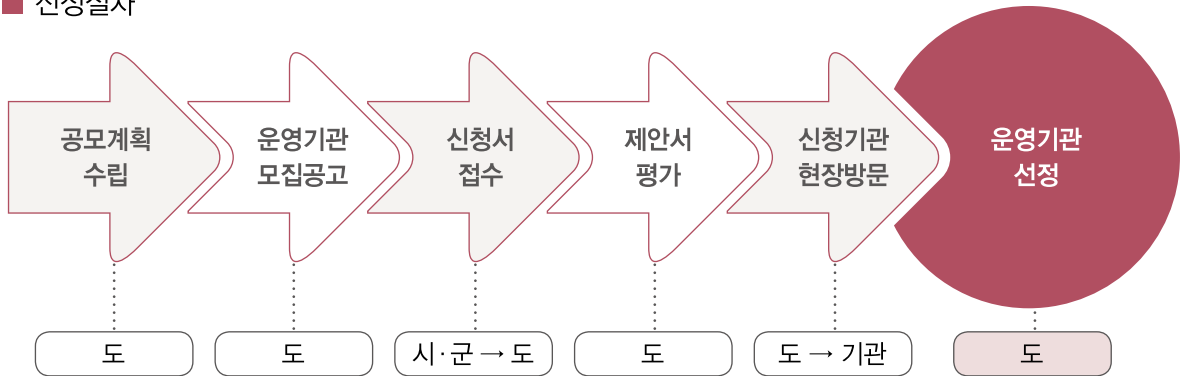
#### 4) 운영기관 선정방안

■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■ 신청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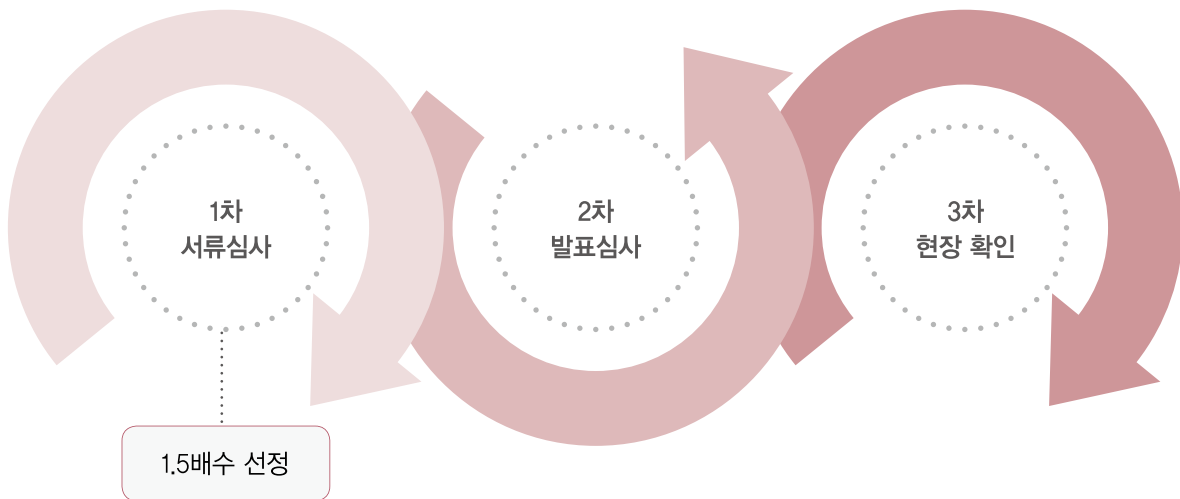
- 시·군(지자체),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지역 내 복지재단, 법인, 단체 등 컨소시엄 구성
- \* 유관사업 선행경험 및 실적 기관 우선

■ 선정절차



■ 선정심사

- (선정심사위원회) 사회보장위원회, 경북도(국·실장),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경북도의회, 학계, 연구진 등 5~7인으로 구성



■ 향후 방향

- 선도사업 종료 후, 사업지역 운영 모델을 발전시키고 확산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 지속

#### 참고문헌

경상북도. (2018). 경북 이웃사촌 행복공동체 육성계획.  
이상호. (2018). 한국의 지방소멸 2018. 한국고용정보원.  
통계청. (2017). 인구주택총조사.

## 2] 주요정책 소개 :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<sup>3)</sup>

- 보건복지부는 사회 안전망 밖에서 복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, 보다 촘촘한 안전망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「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」를 9월 5일(목) 발표함.
-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정부는 복지 3법 제·개정\*,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, 읍·면·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도입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.
  - \* 국민기초생활보장법('15. 7월 개정), 긴급복지지원법('15. 7월 개정), 사회보장급여법('15. 7월 제정)
- 지난해 증평모녀 사망사건('18. 4월)을 계기로,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을 마련\*('18. 7월 발표)해 추진 중임.
  - \* '복지 위기가구, 주민과 같이 찾고 함께 돕는다('18. 7. 23. 보도자료 배포)
- 그러나 지난 7월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우리 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줌.

### 〈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사망 관련, 사회안전망 누락 원인 진단 〉

- ① 아파트 임차료 연체(16개월)에도 불구하고, 체납정보가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입수되지 않음
  - \*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정보를 LH 및 전국 지방공사로부터 입수 중이나, 사건이 발생한 재개발임대아파트의 임차료 체납정보는 SH공사에서 전송 누락
- ② '18. 10월 아동수당 신청 당시 소득인정액이 0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, 기초자치단체(관악구)에서 추가 복지급여 지급 가능성 안내 등 적극 대처 미흡
  - \* 아동수당 신청, 계좌변경 등을 위한 3차례 동 주민센터 방문('18. 10~12월)
- ③ 하나센터(탈북민 지원), 사회복지관 등 민간과 공공(지자체) 간 정보연계 미흡
  - ▶ 이번 사건은 위기가구 발굴체계 부족, 복지급여 신청주의 한계, 동 주민센터의 위기가구 지원 의무 소홀, 공공·민간의 정보연계 부족 등이 동시에 작용

▶ 탈북민 뿐 아니라 모든 위기가구 대상 사회보장급여 지급 업무의 전반적 점검·개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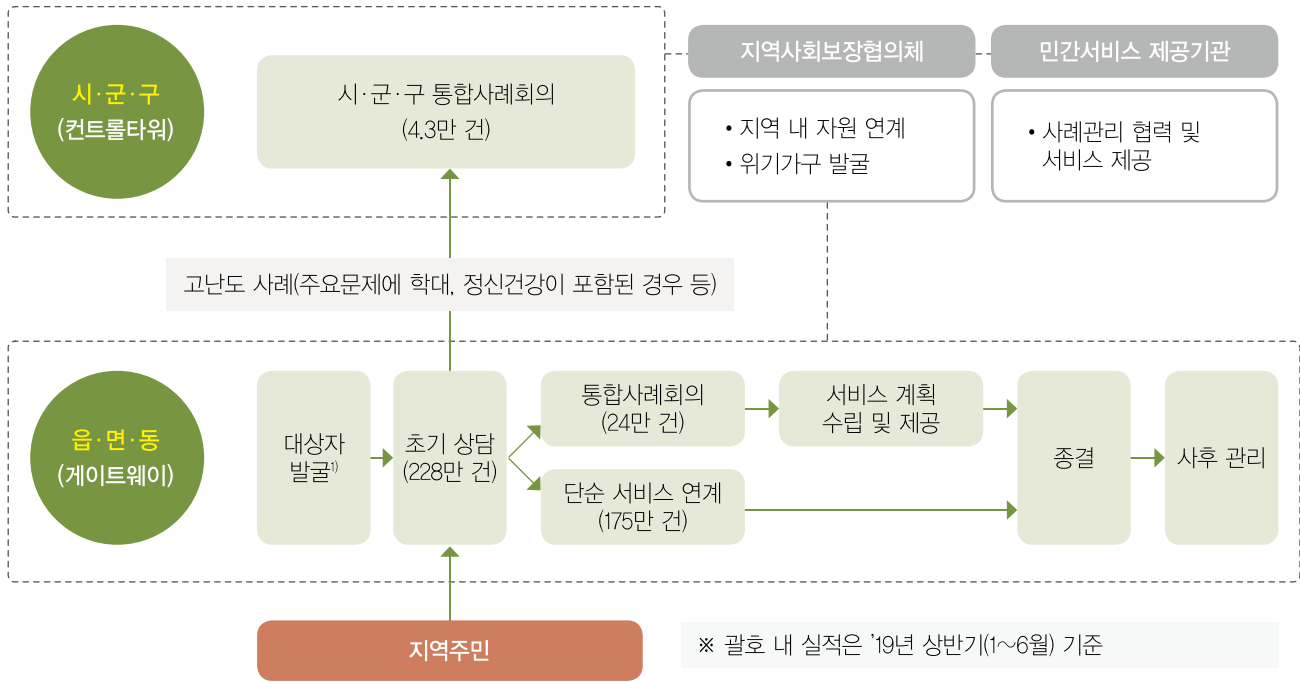
- 이에 정부는 2018년 7월 발표한 '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'을 대폭 보완\*함.

\*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등 의견 수렴('19. 8. 16. 시·도 국장회의, 8. 20. 읍·면·동 현장 공무원 간담회 등)

3) 보건복지부, 2019. 9. 5.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 조치 보도자료에서 발췌

- 특히,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이번과 같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및 신청·접수, 서비스 지원 등 사회보장급여의 전반적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함.

「사회보장급여법」 상 사회보장급여\* 지급 절차 및 현황



1) 발굴실적 :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(118만 건), 명예사회복지공무원(21만 건)

\* 사회보장급여 :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험, 공공부조, 사회서비스(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2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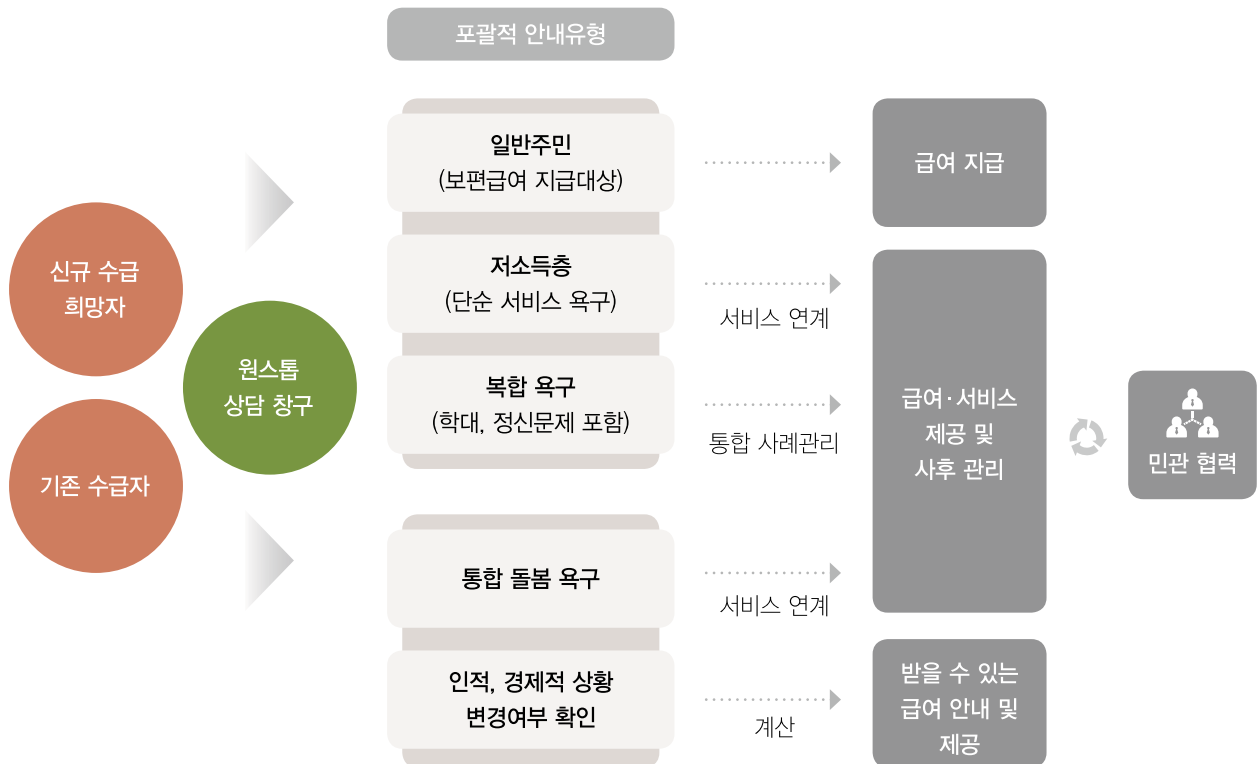
핵심 정책과제

세부 추진 목표	핵심 정책과제
1.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장벽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읍·면·동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상담·신청 기능 강화</li> <li>복지멤버십 조기 도입으로 포괄적 신청주의 구현</li> </ul>
2.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위험 위기가구 실태조사 정례화 및 사례관리 내실화</li> <li>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로 기초수급 요건 탄력적 적용</li> </ul>
3.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 노력 강화(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)</li> <li>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입수정보 확대</li> </ul>

## 1. 급여 신청 장벽 완화

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이 신청주의의 벽에 부딪혀 법률에 보장된 수급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, 급여 신청 장벽을 완화해 나감.

- 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'원스톱 상담창구' 설치로 보건·복지·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의 포괄적 안내·상담·신청 기능을 강화함.
-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, 전국 읍·면·동에 찾아가는 보건·복지팀 설치를 조기에 완료\*(당초 '22년 → '21년) 하고, 사회복지·간호직 공무원 1만 5,500명을 신속히 확충\*\*하여 읍·면·동에 집중 배치.
  - \* '19. 6월 현재 2,667개 읍·면·동(76.2%)에 찾아가는 보건·복지팀 설치
  - \*\* '22년 1만 5,500명 확충완료 목표로 '19년 하반기까지 7,902명(51%) 선발·배치 예정



[그림 3] 원스톱 상담창구 서비스 흐름도

② ‘복지멤버십’ 조기 도입(당초 '22. 4월 → '21. 9월)으로 포괄적 신청주의를 구현해 나감.

-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\* 대상 신청 가능한 사업을 먼저 제시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신청을 도입.

\* (1단계) 장애인연금, 기초연금, 한부모 등 소득자산 조사 대상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교육·주거급여 수급자, (2단계)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포괄적 신청 적용



[그림 4] 복지멤버십 흐름도

- 국민 누구나 한 번 멤버십 가입 시 개인 상황에 대한 주기적 모의조사·판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계획.

③ 「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(’21~’23년)」 수립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검토를 통해 빈곤층이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고, 그 과정에서 좌절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임.

## 2.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

■ 고위험 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,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, 민관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임.

① 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지자체 별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의무화·정례화하도록 함.

–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,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격월로 입수 중인 약 450만 건(회차별)의 위기정보 데이터\*를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.

\* 위기가구로 예측된 5~7만 명 + 입수된 위기정보(약 450만 명)

### 2019년 하반기 기획조사 계획(9~10월)

• 위기가구 발굴 긴급 실태조사

- ① 아동수당, 장애인 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 0인 가구
- ②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자 등

• 고위험 위기가구 예측규모 확대

現 격월 회차별 5~7만 → 18만 건 지자체 통보

②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강화하고,

–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확대\* 외에, 지역 내 복지관\*\*,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.

\* 현재 시·군·구 928명 배치 + '20년 100명 추가 확대 계획

\*\* 사회복지관, 장애인복지관 등에 통합사례관리사 각 3인 추가배치 추진 중

③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가구\*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·심의 활성화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보호하도록 함.

\* 수급권자의 부양비 제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인 경우

④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('22년)으로 위기가구 발견, 민간자원 연계, 사후 관리 등에서 지자체-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강화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임.

### 3.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

■ 가구의 위기상황을 알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,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해 나감.

① 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,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, 검침원, 택배기사, 배달업 종사자 등 생활업종 종사자의 비중을 확대.

－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고위험 위기가구 간 일촌맺기(1:1 혹은 1:多)로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등을 활용한 주기적 안부 연락 실시를 추진할 계획.

②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주도적 따뜻한 공동체(주민망) 형성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·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.

\*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진행 중(행안부, '19년 총 23.5억 원)

③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(관리사무소)를 포함\*하고,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무협조 대상 확대를 추진\*\*.

\*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

\*\* (現) 사회복지시설, 연금공단, 건보공단, 보건소, 경찰서 등 → (확대 후) 주민등록전산정보·지방세 체납정보(주민세·재산세·자동차세) 등 보유기관(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11조 개정 추진)

④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,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추가 입수\*하고,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 단축\*\*으로 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일 계획.

\*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(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) 개정 추진

\*\* 건보료 체납정보 입수 기준 단축 시 약 30만 명 정보 추가입수 가능(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)

편집위원 류승완, 김동화, 정상기.

「경북행복 BRIEF」는 경북행복재단의 보건·복지 연구성과 및 주요 동향을 경상북도민에게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격월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.  
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.